



MVPR-2008-09

VIP REPORT

2008. 4. 14.

-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
-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홍순직, 주원, 이부형,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113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02-3669-412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 -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Executive Summary	i
I.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 평가	1
II.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4
III.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14
■ HRI 경제 지표	16

I.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 평가

1. 외교 분야

지난 10년간 한미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여 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에 따라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북미-남북관계의 병행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2002년부터 시작된 북미관계 악화는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충돌하였고, 이는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마찰은 한미간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갈등을 일으켰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도 남남갈등을 격화시키기도 하였다.

2. 경제 분야

최근에 들어 한중간 교역 관계가 강화되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2000년에는 22%에서 2007년에 12%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2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FDI는 44.9억 달러로 전체 FDI에 49.4%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07년에는 23.4억 달러로 전체의 22.3%에 그쳤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한국 대미 수출은 1998년 228억 달러에서 2007년에 458억 달러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여전히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 중 미국 자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신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의 발전을 한미동맹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새로운 경제 협력 틀로서의 FTA가 될 것이다. 먼저,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강화된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 및 한미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주의 가치 하에 한미간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 관문으로써의 FTA 비준이 경제 분야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1. 동반자관계 복원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PSI 및 MD 체제 참여 문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과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 체제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도 PSI 및 MD 체제에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PSI와 MD 체제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나, 쉽게 참여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및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과 국내 정치적 갈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은 미군의 해외주둔비용을 동맹국들에게 분담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정도에 맞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미 간에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기지이전 비용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지 이전 사용은 안 되며, 기지이전은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미국이 기지이전 재검토,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작권 이양 시기 조정, 주한미군 추가 감축 중단 등의 요구 사항을 반대급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양국의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와의 전쟁 협조 문제) 현재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의 참여를 동맹의 중요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테러와의 전쟁'에의 참여와 협력에 동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철수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에의 재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재파병 결정이 쉽지 않지만,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파병을 거부하고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이나 아프가니스탄 전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비용 부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

2.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북핵-6자회담의 원칙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강경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한국에 이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은 미국이, 비용 부담은 한국이'라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서는 비껴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의 공유를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촉구하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북미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3. 한미 간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의 관문으로서의 FTA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르는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 FTA는 2007년 공식 타결 이후 현재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 쇠고기 시장 개방 및 자동차 부문 재협상 등의 선결조건 해결을 제시하고 있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 한미 FTA의 미 의회 내 비준에 장애 요인으로서는 첫째, 미국의 쇠고기 재수입 요구를 들 수 있다. 2007년 4월 FTA협상 타결 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했으나, 2007년 5월 및 8월에 기준치 이상의 뼈 조각이 발견됨으로써,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의 완화 등을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인준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부문 재협상 압력) 둘째, 미국은 한미 FTA 체결안을 무시하고 자동차 시장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세인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문 무역 흑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요구) 셋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사실상 미국 정부의 불인정 문제에 대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치적 수준에서의 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간 그 기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바, 우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III.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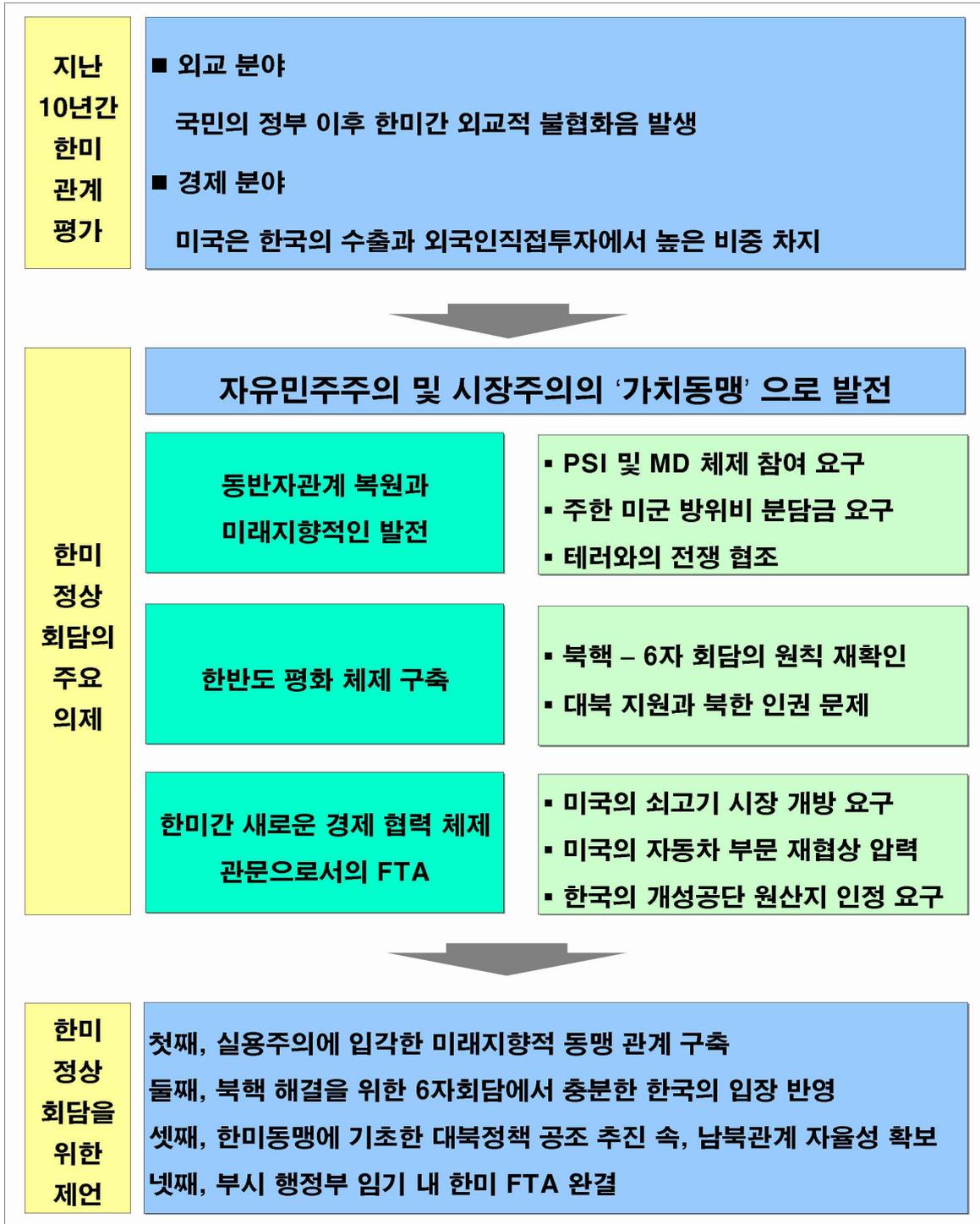
첫째, 실용주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한미동맹은 과거의 이념적 동맹이 아니라,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동맹관계에 기반으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 전략대화를 한 등급 격상시키고 정례화해야 한다.

둘째,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6자회담이 한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채 타결될 경우, 지난번 KEDO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명분은 미국이 취하고 한국은 비용 부담만 떠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의 공조를 추진하되, 남북관계의 자율성도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은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전 세계적인 차원의 외교·안보적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민족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북미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민족적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되며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부시 행정부 내에서 한미 FTA를 완결해야 한다. 한미 FTA 타결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양국 정상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결정 결과를 가지고 각국 의회와 이해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 >



한미 관계의 새로운 틀 모색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I. 지난 10년간 한미 관계 평가

1. 외교 분야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북한과 관련한 한미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왔음
 -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후반기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과 조화를 이루었으나,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함
 -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정권의 갈등은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노정했음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대화 노선과 조화를 이루어, 북미-남북관계의 병행적 진전을 이루었음
 -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됨
 -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 시인으로 북-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됨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임기 내내 마찰을 빚음
 -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거부하고, 자율적인 남북관계를 지속하고자 함

- 부시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에게 대북 강경책의 동참을 요구하며, 마찰을 빚음
 - 특히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구체화하고, 노무현 정부의 동참을 요구함
 -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북 강경책으로의 동참을 거부함
- 지난 10년간 한미관계의 갈등은 주로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였으며, 남한의 자율적인 남북관계 지향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의 마찰이 주된 원인이었음
-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일치했던 경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의 큰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음(김대중-클린턴 정부)
 - 그러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 예외없이 한미간의 외교 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마찰이 발생하였음(김영삼-클린턴 정부, 김대중-부시 정부, 노무현-부시 정부)
 - 한미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PSI 및 MD체제 참여 문제, 남북 경협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국내 여론의 갈등이 고조되었음

<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 변화 >

구분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
시기	1998.2~2003.2	2003.2~2008.2
정부	한국 김대중	노무현
	미국 클린턴 → 부시 (1993.1~2001.1) (2001.1~2009.1)	부시 (2001.1~2009.1)
주요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포동 미사일 발사(98.8) · 서해교전(99.6) · 남북 정상회담(2000.6) · 조명록 방미와 올브라이트 방북(20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테러(2001.9) · 부시대통령 북한 '악의 축' 규정(2002.1) ·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 방북(2002.10) · 이라크 전쟁(2003.3) · 북핵 6자회담 개시(2003.8) ·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2006.7/10) · 남북 정상회담(2007.10)
한미관계	· 협력관계에서 갈등으로	· 갈등과 협력의 반복
국내여론	· 남남갈등 발생과 강화	· 모든 분야에서 남남갈등 격화

2. 경제 분야

○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대미 수출은 1998년 228억 달러에서 2007년에 458억 달러로 약 2배 가량 증가
- 그러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는 같은 기간 17%에서 12%로 축소 (2000년에는 22%에 달하기도 하였음)
 - 이는 2000년대 초반 중국 경제가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부터 한중간 교역 관계가 강화되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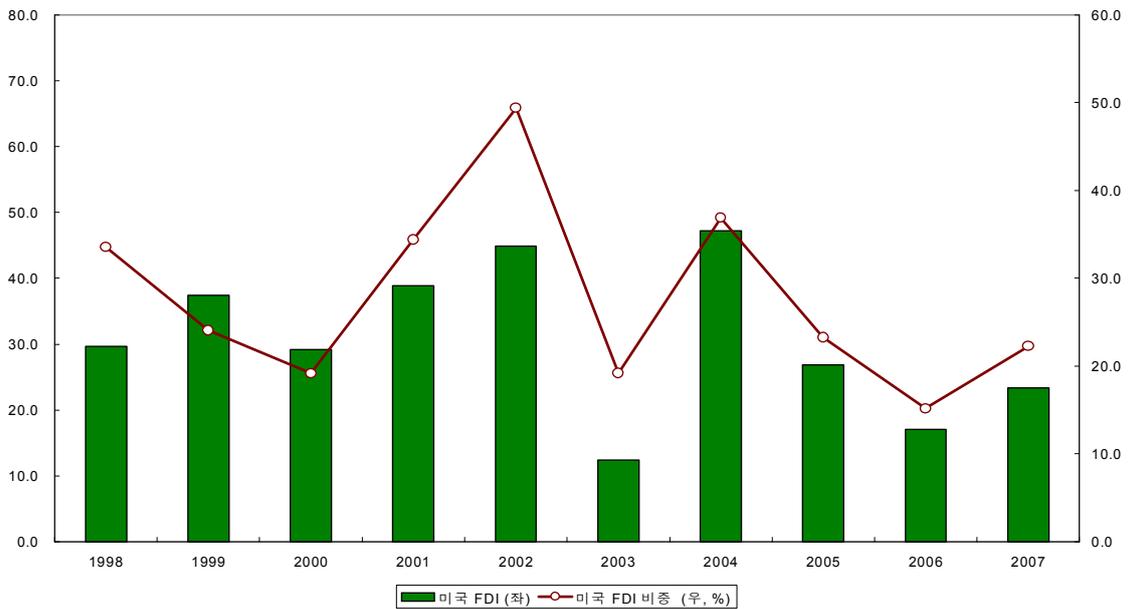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수출액 및 대미수출/총수출 비중 >



자료 : 통계청.

- 2002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FDI는 44.9억 달러로 전체 FDI에 49.4%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07년에는 23.4억 달러로 전체의 22.3%에 그침
 - 그러나 2007년의 경우에도 미국은 여전히 국내 FDI 대상국중 1위의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자본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한국의 대미 FDI 및 대미FDI/총FDI 비중 >



자료 : 지식경제부.

II. 한미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1. 외교 분야 : 미래지향의 동반자 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 지난 10년간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었던 한미동맹을 복원,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큰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음
 - 한미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의 갈등을 겪었으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마찰이 있었음

-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단순한 동맹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 동맹'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미래비전' 선포 등 동맹관계 강화·발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음
- 동맹 강화를 위한 의제로서는 미사일 방어(MD : Missile defense)체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의 참여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테러와의 전쟁에의 협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이 될 것임
- 한미동맹의 발전에 기초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요구됨
 -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됨
 - 이명박 정부는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의제로서 당면의 과제인 북핵-6자회담 문제, 남북 문제 및 대북정책 공조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미래지향의 동반자 관계로의 한미 동맹 발전

① PSI 및 MD체제에의 참여 문제

- 현황
 -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의제는 한국의 PSI 참여 확대와 MD체제 참여 문제임
 - 현재 한국은 PSI에는 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MD체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PSI의 경우, 8개 조항 중 역내·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개항에만 참여)

- 양국의 입장

- 최근 미국의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MD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MD체제 참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PSI 및 MD체제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 및 중국 등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망

- 미국은 한국의 PSI 및 MD체제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정부는 PSI 및 MD체제 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이겠지만, 참여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PSI와 MD체제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됨

※ PSI와 MD체제에 참여할 경우

- 북한의 격한 반발과 국내 정치적 갈등의 심화, 주변국 반발
- 북한은 한국의 MD체제 참여에 대해 “외세와 야합해 온 거래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이 격화될 것임
- 중국 역시, 우리 정부에 PSI 및 MD체제 참여에 대한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

- 현황

-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간 기지 이전

비용 문제가 쟁점 사항이 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2008년까지 3만 7천명의 미군을 2만 5천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현재 2만 8,500여명 수준)
-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를 기지 이전 비용 분담의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함

- 양국의 입장

-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인 윌터 샤프는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 비용(총 100억 달러) 중, 미국의 부담은 약 24억 달러이며, 나머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용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힘(약 75억 달러)
- 미국은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은 기지 이전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전망

- 미국은 한국의 기지 이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할 것임
- 한국정부는 미국의 비용 부담 요구에 전시작전권 반환(2012년 반환 예정)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임
-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기지 이전 비용 부담은 서로의 카드를 내놓고 협상하되, 양국 관련 부서를 통해 추추 구체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지위를 나토와 일본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③ 테러와의 전쟁에의 협조 문제

- 현황

- 현재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이라크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음

- 양국의 입장

-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의 참여를 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임
-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차기 주한미대사 내정자 케슬린 스티븐스는 아프간 재파병이 정상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한국 정부는 지난해 아프간에서의 인질 납치사건으로 인해 철수한 한국군의 재파병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재파병 결정

-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파병이 결정될 경우, 국내에서의 정치적 찬반 갈등이 격화될 것임
-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이 전작권 이양시기 단축, 주한미군 추가 감축 등의 카드를 들고 요청할 경우, 재파병 결정 가능성은 있음
- 한국이 재파병 요구를 거절할 경우는 전비 부담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됨

- 전망

- 정상회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밝힐 것임
- 이라크 전쟁에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의 재파병

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임

- 이외에도 미국은 PKO(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응할 것으로 예상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④ 북핵 - 6자회담

- 현황

- 3개월 이상 지연되었던 북핵 신고 문제가 4월 8일 싱가포르 회동을 통해 타결 직전에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말 - 5월 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UEP(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시리아 핵협력 부인'과 미국의 '정확한 신고'의 절충으로서 '비밀 양해각서' 형태의 북미간 합의가 타결될 전망
-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되어, 핵폐기 2단계를 마무리하고, 핵폐기 3단계를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양국의 입장

- 미국은 핵폐기 2단계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미합의에 의존하고 있음

- 전망

- 북핵 신고문제가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재확인하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임
- 미국은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한국에 이전시키고자 할 것임
- 이에 따라 '협상은 미국이, 비용 부담은 한국이'라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⑤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

- 현황

- 현재 미국은 북핵신고의 진전에 맞춰, 북한에 50만톤의 곡물을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
-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쌀과 비료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한 찬성 등 대북 인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 역시, 국무부 발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명시하고 있음

- 양국의 입장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민들의 감정과 투명성, 호혜적 상호주의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
-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 인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

-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임
- 그러나 미국은 원칙적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현재 북-미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망

-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서는 비껴있는 것으로서, 원칙적 입장의 공유를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임
- 다만, 최근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원칙에 맞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2. 경제 분야 : 한미 간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의 관문으로써의 FTA

1)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통과의 필요성

○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르는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요구

- WTO 중심의 다자주의 형태의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경제 블록 단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의미하는 FTA의 조속한 발효가 절실함
-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그 동안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글로벌 경제 교역량 증가율이 급락함으로써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부문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있음

2) 한미 FTA의 진행 과정

○ 한미 FTA는 2007년 공식 타결 이후 현재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임

- 한미 FTA는 공식개시 선언('06년 2월 3일)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타결('07년 4월 2일)
- 이후 추가협상도 완료('07년 6월 29일)되었으며, 현재 양국의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임

3) 한미 FTA 비준의 장애 요인

○ 한국은 2009년 발효를 위하여 비준동의안의 5월말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 및 자동차 부문 재협상 등의 선결조건으로 인해 의회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임

① 미국의 쇠고기 재수입 요구

- 2007년 4월 FTA협상 타결 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했으나, 2007년 5월 및 8월에 기준치 이상의 뼈 조각이 발견됨으로써,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 미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기준의 대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인준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번 방미 과정에서 국내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쇠고기 수출업 단체의 미 행정부와 한국 실무 그룹에 대한 전방위 노력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자칫 불리한 협상이 진행될 우려도 존재

②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전면 재협상 요구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세인하 및 생산성 향상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FTA 타결안을 거부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의회, 특히 민주당내에서는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 대수 증가에 따라 미국 내 한국차 판매의 관세 철폐 쿼터를 주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③ 한국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사실상 미국 정부의 불인정 문제에 대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치적 수준에서의 합의 필요성이 존재함
- 기존 한미 FTA 체결로 양국은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였고,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함
 - 그러나 양국간 그 기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
 - 반면 미국 측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음
 - 이러한 한미간 입장차로 인해 향후 이에 대한 실무 협상 자체가 공전(空轉)할 가능성이 존재함

< 참고 >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¹⁾

-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음
- 비자발급관련 기회비용과 수수료 절감을 통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국민의 편익 제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이 기대됨²⁾

III.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 과거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수평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됨

- **(한미간 전략대화 격상 및 정례화)** 현재 한미간에 구축된 장관급 전략대화를 동맹강화에 부합하게 격상시키고, 정례화하는 것이 요구됨
 - 한미간의 주요 현안 및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전략대화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정례화하는 것이 요구됨
 - 전략대화는 현재의 한반도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채널이 요구됨

- **(한반도 평화체제)** 현재 한반도는 북핵-6자회담의 타결 및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의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미간 긴밀한 협의채널이 요구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수행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1) 미국 법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

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8년 4월.

-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라보는 한·미간의 시각 차가 존재하며, 우리는 민족적 가치를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한미간 공조에 기반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증진도 모색하여야 함

○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함**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남북관계는 남북한 사이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기반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남북관계의 자율성 유지는 북미관계 종속되지 않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북관계의 자율성 유지는 북미관계 및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남북한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요구에 맞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남북관계의 자율성 유지는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 발전을 위한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경제협력 등의 생산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서 한미 FTA를 완결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타결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양국 정상간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함
- 동시에 FTA 비준의 주요 부문별 현안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미국 내 이해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도 병행해야 할 것임 **HRI**

【총괄】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외교】 정영철 연구위원 (3669-4014)

【경제】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9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5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4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1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1.6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거 래 통 관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54	6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51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8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2)	(10.5)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7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3.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60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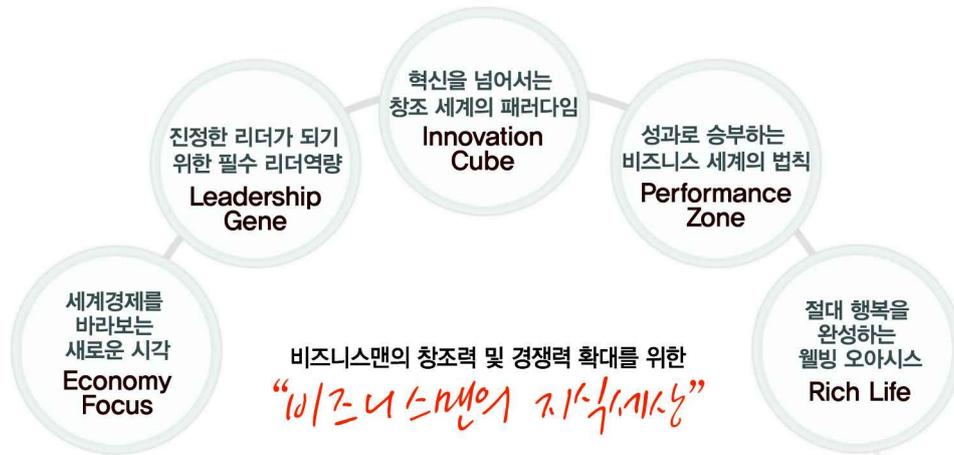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